

aT, 최근 5년새 1조3600억원 예산 투입 농수산물 유통비 ↑

이원택 의원 “농산물 유통·물류 정보 등 데이터 디지털화 통한 혁명 필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최근 5년간 1조3,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수산물 유통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T는 지난 2015년 2,700억, 2017년 2,300억, 2018년 2,000억, 2019년 2,000억, 2020년 2,500억 등 매해 2천억 이상의 유통개선사업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은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와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의 농산물 유통비용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지불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유통 비용률은 4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비용 중 직·간접비는 35.4% 소매단계 27.4%, 도매단계 10.9% 출하단계 9.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가가 농산물을 판매하고 받는 농가 수취는 52.5%로 나타났다. aT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농산물직거래활성화, ▲도매시장 운영 개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등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2010년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42.3%에서 19년 현재 기준 47.5%로 유통비용률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경우 시 유통비용률과 유통센터 직접 공급시 유통비용률을 비교해 보면, 도매시장 경우 방식은 소비자 지불가격 중 44.4%가 유통비용으로 소요되고, 농가 수취가격은 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에서 유통센터로 직접공급 될 경우에는 39.7%가 유통비용으로 소요되고 농가수취는 60.3%로 나타났다.

한편 aT는 20년 사과, 배, 방울토마토 3품목에 대한 온라인 판매 유통비용률을 조사 했는데, 유통비용률이 33.7%로 나타나 도매시장 유통비용률에 비해 10.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원택 의원은 “농산물 유통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매해 수천억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유통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사업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농산물 유통정보 및 교통·물류 정보 등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물류혁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국 소방관서 소방헬멧·면체 세척기 보유율 28%뿐

소방관헬멧·공기호흡기(면체) 등 소방장비에 묻은 유해물질을 씻어내는 세척기의 보급률이 2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 1,089곳 중 소방헬멧·면체 세척기를 보유한 곳은 304곳으로 보유율은 28%에 그쳤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소방헬멧·119안전센터별 소방헬멧·면체 세척기를 1대씩 비



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102%), 대구(131%), 제주(138%)를 제외한 시·도소방본부에서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율이 10%도 되지 않는 시·도소방본부는 18곳 중 10곳으로 ▲창원(7%), ▲충북·충남·전남·경남

(5%), ▲인천·광주·대전(4%), ▲부산(3%), ▲전북(2%)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보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전북의 경우에는 51곳의 소방관서 중 1곳에만 소방헬멧·면체 세척기가 비치돼 있었다.

또한 세종(33%), 경기(20%), 강원(14%), 울산(12%), 경북(11%)도 보유기준에 한참 미달한 상태로 드러났다. 아울러 올해 소방헬멧·면체 세척기 구입예산은 서울, 광주, 충남, 강원만 편성됐을 뿐, 나머지 14곳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호상 기자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20대 더불어민주당대통령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정환희(오른쪽) 변호사와 김진석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들고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무리한 사사오입식 해석...명백한 위헌”

이낙연 지지자들,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당의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선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결과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판권을 구했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의 소송대리인 정환희 변호사는 14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당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송 대표자 A씨는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정통스러운 역사를 가진 당이라며 ‘지난 10일 대선후보 경선은 민주당의 훼손은 물론 결선 투표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사오입 식인 사퇴자 유효표를 인정하지는 주장이 반박됐다”면서 “무리한 사사오입 식 해석에 명백

한 위헌 소지가 있으나 사법부에 판권을 맡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이낙연 캠프에서는 승복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자 A씨는 “당 의 주인은 권리당원이고 경선에 참여한 시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위반 내용은 결선투표제의 근본 취지인 대표성 확보, 사표 방지가 훼손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결선 투표권이 있는 4만6000여명의 권리당원과 시민들이 소송을 위임했다고 한다. /뉴스

“정신장애인복지관 설립 적극 추진해야”

이윤자 전주시의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

전주시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신장애인 복지관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전주시의회 이윤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제38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전주에 선제적으로 정신장애인복지관을 설립·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 재활, 평생교육 지원 등에 이르는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자립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해택은 전무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신장애인복지관 설립과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 차원의 복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필수적 요소의 하나로 복지관 설립·운영을 꼽은 것이다.

그는 “전주시가 정신장애인복지관을 활성화해 운영한다면 정신장애의 차별을 해소하고, 일률적 서비스부터 개별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은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자 가족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시에서 지역 차원의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해 차별 없는 도시 통합발명의 일부 도시로서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청년에게 배우다’ 프로젝트를 통해 14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하이하우징(유)을 방문했다.

‘전주 청년에게 배우다’

청년이 머무는 전주 만들기 해법 찾기 일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청년에게 배우다’ 프로젝트를 통해 14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하이하우징(유)대표 민형선(유)을 방문했다.

“청년에게 배우다는 전주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청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청년이 머무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해법을 찾고자 전주시장 출마 선언에 앞서 지난 4월부터 기획·시작한 프로젝트다.

현재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주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지만 갈 세대의 청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청년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 전 원장은 그동안 ▲부모마음 ▲충진(소유)대표 문수현 ▲수화담(대표 장현미) ▲(주)엑솔(양승보) ▲우레디(대표 김주하) ▲블리퐁(대표 서늘) ▲간식을 부탁해(대표 김하나) ▲ALGOS(대표 조승혁) 등의 청년 대표들을 만나 생각을 공유해 왔다.

이번에 방문한 하이하우징(유)은 탄소발자국을 이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탄소응용 제품을 제작하는 친환경 소셜벤처기업이다. 이곳은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난방시설을 탄소 난방으로 공급하는 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시공 공법을 보유, 기술력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민형선 대표를 만나 예로 상황을 청취하고 기업의 시장 확대 방안 등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민 대표는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을 맡겨 펼칠 수 있도록 행정과 정책의 기준이 만들어지지 바란다”며 “보유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 하이하우징 찾아

이에 대해 조지훈 전 원장은 “전주 내 기업들이 맡겨 사업을 펼칠 때 전주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며 “한옥마을에 기울었던 노력만큼 기업 성장을 위해 정성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만난 기업인 대부분 지역을 떠나는 청년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청년들과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며 “더욱이 청년 기업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전주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생각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콘텐츠진흥원, 김건희 관상 어플 상용화 못하고 폐기

‘지원금 1억짜리’ 김씨 표절 의혹 박사논문만 남아 논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논문 재조사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4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에게 지원했던 관상 어플이 상용화되지 못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결국 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한 것은 표절의혹 1억원짜리 김건희 박사논문 뿐”이라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이사로 재직하던 H컬처에 크놀로지(이하 H컬처)는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지난 2007년에 7천만 원, 2009년에 1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H컬처가 관상 어플(에니타)을 개발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다.

김 의원은 김건희 씨가 이 관상 어플 제작지원사업의 수혜책임자로 이름을 올렸고, 한 달에 350만 원씩 4개월 동안 1400만 원의 인건비를 받았다



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논문은 바로 이 사업계획서와 이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의 다수를 그대로 베껴오는 의혹을 받는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1억원 지원을 받고 만들었던 어플은 시판용이 아닌 간단한 버전이었다. 관상 별명 세계 정도만 서비스만 보이고 나머지는 정도였다”는 당시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H컬처 대표(관상 어플 에니타의 특허권자) 홍모 씨와의 통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며, “김건희 씨가)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없게끔 쓰는 과정이 성의 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원작자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 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관리규정’에 의하면, 사업수행기관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은 김건희 씨의 관상 어플이 상용화되고 널리 쓰일 것이라 예상해 지원을 했지만, 결국 결과물은 달아 준 논문의 논문만 남아 있는 것”이라며 “나라에서 월급도 주고 논문 쓰라고 1억여 원 개발비까지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 원인이 된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국민혜제로 만들어졌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관상 어플의 원 저작자조차 김건희 씨의 논문이 ‘가치가 없는 논문이다’라고 광한 증언을 확보했다”며 “이제는 콘텐츠진흥원에서 규정위반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김희수 도의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워드코너시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20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균형적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위원장(전주9·교육위원회)은 15일 전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난해 등교수업 중단에 따른 원격수업, 온라인 개학 등 비대면 교육방식이 오히려 교

육격차를 심화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등교수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하지만 등교수업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다. 평균 20명 남짓한 교실 한 칸에 너무 많은 학생이 수업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학급당 학생수 평균이 21명 이상인 학교는 초등학교 95교(전체 425교), 중학교는 90교(전체 210교), 고등학교는 48교(전체 133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28명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호상 기자

나인권 도의원, 전북 항공레포츠 산업 육성 촉구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항공레포츠는 해외에선 이미 대표적인 레저스포츠로 자리 잡는 지 오래지만, 전북도는 관련 정책이 전무하다”면서 “항공레포츠를 관광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패러글라이딩이나 스카이다이빙 등 최근 급성장 중인 항공레저 시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호상 기자

